

# 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3-27호 | 2023년 10월 12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정태호 | idp.theminjoo.kr

## 국세결손 59조원? 지방세결손 및 상저하자 고려 시 최대 70조원

채은동 연구위원

### 《 요약 》

#### ■ 세입결손액 검증 : (기획재정부) 59.1조 원 vs. (민주연구원) 66.5~69.8조 원

- 기재부 국세결손 : 법인세 25.4조 원, 소득세 17.7조 원, 부가세 9.3조 원 등 총 59.1조 원
  - 상저하자중의 세입환경 개선을 전제하여 9~12월 추가 세수결손 6.9조 원\* 추정
  - \* 전년동기대비 세입감소액(조 원) : (1~4월) △33.9 → (5~8월) △13.7 → (9~12월) △6.9(추정)
- 민주연구원 : 지방세결손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 주요 세목 국세결손 재추계
- 시나리오①(기재부 세수결손 인용 및 지방세결손 포함) : 총 세입결손 66.5조 원
  - 국세결손 문제는 국세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편성하는 지방세입의 예산 오류까지 연쇄 유발
  - 기재부 국세결손 59.1조 원에 지방세결손액 7.5조 원 합산
- 시나리오②(민주연구원 국세결손 추정 및 지방세결손 포함) : 총 세입결손 69.8조 원
  - 대기업의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, 저조한 수입 등을 고려하면 국세결손 62조 원 규모

국세결손 및 지방세결손의 시나리오별 추계치 비교 : 2023년

(단위: 조 원)

세입결손 (기재부추계)	법인세 25.4	소득세 17.7	부가세 9.3	기타 6.7	59.1	
시나리오① (지방세포함)	국세결손 59.1 (89%)				지방세결손 7.5 (11%)	66.5
시나리오② (민주연구추계)	국세결손 재추계 62.1 (89%)				지방세결손 7.7 (11%)	69.8

주: 1. 국세결손은 기획재정부의 국세 기준 세수결손액 추정치. 예산대비 실적 부족액을 의미  
2. 시나리오①은 기존 기획재정부 국세결손액에 지방세결손액 계산하여 합산  
3. 시나리오②는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관세 등을 민주연구원에서 추계하여 지방세결손까지 합산  
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및 월별 "국세수입 현황"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■ 지방정부 재정수입\* 감소액 검증 : (기재부) 22.8조 원 vs. (민주연) 30.3~31.5조 원

\* 세입결손은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교부금, 지방세 등을 통해 재정수입 감소로 최종 귀착

- (기재부 추계) △22.8조 원 → (시나리오① : 지방세결손 △7.5조 원 포함) △30.3조 원  
(시나리오② : 민주연 추계 및 지방세결손 포함) △31.5조 원

총 세입결손에 따른 정부주체별 재정수입 감소액 비교

(단위: 조 원)

세입결손 (기재부추계)	중앙정부 36.2 (62%)	지자체 11.6 (20%)	교육청 11.2 (19%)	59.1
시나리오① (지방세포함)	중앙정부 36.2 (54%)	지자체 18.7 (28%)	교육청 11.6 (17%)	66.5
시나리오② (민주연추계)	중앙정부 38.4 (55%)	지자체 19.4 (28%)	교육청 12.1 (17%)	69.8

주: 세입결손은 기재부의 국세결손 추정치. 시나리오①은 기재부 국세결손액에 지방세결손액을 추가하고, 시나리오②는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관세 등을 민주연연구원에서 자체 추계하여 지방세결손까지 고려  
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및 월별 “국세수입 현황”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연구원 분석

■ 재정수입감소 정부대책 평가 : (기재부) 충분 vs. (민주연) 불충분 및 국가채무 증가

- 기획재정부 : 기금여유자금 등을 이용해 재정수입감소 대응 가능

- 중앙정부 : ①외평기금 20조 원 ②이외기금 4조원 ③불용 8조 원 ④세계잉여금 4조 원 등 36조 원
- 지방정부 :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 ②세계잉여금 7조 원 ③지방세 감면 자율화  
④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(지자체의 모든 사업 발행 가능) 등을 통해 23조 원 커버

- 평가① : 前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하면서 前정부가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 적극 활용

- 기금 조성액(조 원) : ('18년) 0.5 → ('21년) 17.6 → ('22년) 36.0 <지자체 24.4, 교육청 11.6 >
- 36조 원 중 조례에 따라 최대 29조 원(80%)이 활용가능하며, 기재부 대책 34조 원\*은 부풀려짐  
\* 관련 통계(조 원) : ('23.7.4. 기재부) 12 → ('23.9.17. 기재부) 34 → ('23.9.21. 행안부) 지자체 14

- 평가② : 지방자치단체 19.4조 원 재정수입감소 대응 어려움

- 세입결손\*과 별개로, 부동산시장 침체\*\*에 따라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입 난항  
\*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손은 지방세액(2021년 112.8조 원) 대비 10.3~17.0% 수준  
\*\* 주택매매 거래량(만 건) : ('22.1~7월) 35.0 → ('23.1~7월) 32.3 <전년동기비 △7.7% >
- 지방정부 지출 삭감 →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(현재 전망치 1.4%)

- 평가③ : “내 임기만 아니면 돼 (Not In My Term)” → 향후 국가채무 반영되는 분식회계

- 외평기금 : 올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내년 원화 외평채 18조 원 발행 → 내년 국가채무 증가
- 지방정부 : ①31조 원 결손액 감당 불가 → 요건 완화된 지방채 발행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  
②자율화된 지방세감면(재정지출 우회안) 확대 → 지방세 감소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

- 평가④ : 성장률 둔화 → 세입결손 → 외평채 · 지방채 → 국가채무 증가 → 재정건전성 악화

▶ 키워드: 국세결손, 지방세결손, 지방정부 부담, 국가채무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# 1. 세입결손액 검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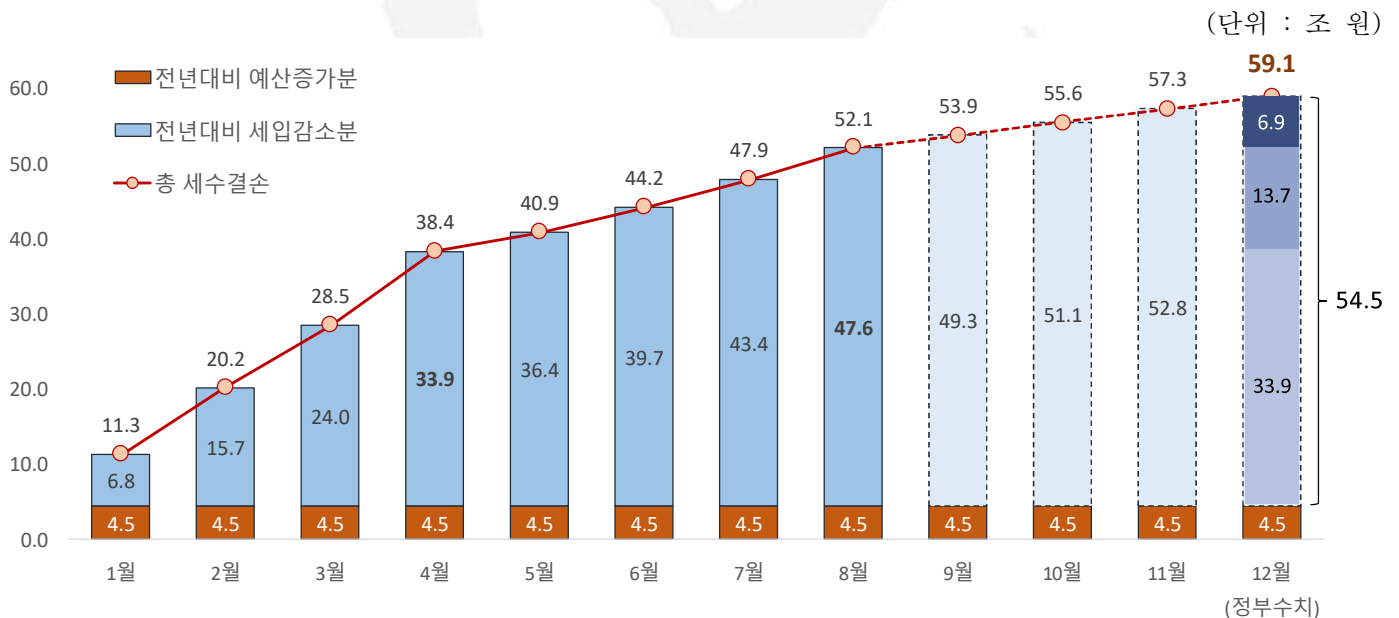
## (1) 기획재정부 : 세입결손 59.1조 원

-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('23.9.18.)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 59.1조 원 발표
    - 1~8월 국세징수 상황을 참고하여 9~12월 세입 전망 추정. 8월 국세수입은 10월 4일 발표
    - 올해 세입결손의 핵심사항인 법인세수(△25.4조 원)의 중간예납\* 실정을 파악하고 재추계
      - \*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정부가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. 12월 말 법인은 1~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~10월말까지 신고납부
- (예) 2022년 법인세 : 최종신고(3월 27조 원, 4월 20조 원), 중간예납(8월 17조 원, 9월 13조 원)

### ○ 국세 세입결손 월별 요인분해

- 세수결손 △59.1조 원(100%)을 분해하면, ①증액예산 목표미달분 △4.5조 원(8%) ②1~4월 세수감소분 △33.9조 원(57%) ③5~8월 세수감소분 △13.7조 원(23%) ④9~12월 세수감소분 (기획재정부 추정) △6.9조 원(12%)으로 구분
- 월별 세수결손 증가분을 살펴보면, 기재부는 연말로 갈수록 세입결손 증가분이 감소할 것으로 긍정 전망 : (1~4월) △33.9조 원 → (5~8월) △13.7조 원 → (9~12월) △6.9조 원

<그림 1> 국세 세입결손 요인 월별 분해



주: 1~8월은 실적치, 12월은 기재부 추정치. 9~11월은 실적과 기재부 추정치를 일정금액으로 증가한 추정치  
 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및 월별 “국세수입 현황”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### ○ 국세 세입결손 세목별 요인분해

- 세목별로 법인세 △25.4조 원, 소득세 △17.7조 원, 부가가치세 △9.3조 원 순
-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, 수입액 감소 등을 감안하면 기재부 전망치는 세입결손을 과소추계
  - 법인세 :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감소(12월말 결산 상장법인 56.4조 원 → 14.6조 원, -74%)에도

불구하고 법인세 감소분 점차 개선 가정(조 원) :  $\Delta 15.8 \rightarrow \Delta 4.4 \rightarrow \Delta 3.8$

- 관세 : 수입액지수 감소세(1월 164 → 8월 141)에도 세입개선 가정(조 원) :  $\Delta 1.4 \rightarrow \Delta 1.4 \rightarrow \Delta 0.3$
- 부가가치세 : 총 부가가치세액의 56~75%(최근 5년)가 수입분으로, 수입액지수의 직접 영향

<표 1> 기획재정부 추정 국세결손액 분해

(단위: 조 원)

	국세수입(기재부 추계)			세입결손 분해 (민주연 계산)					세입 결손 (C-B)
	'22결산 (A)	'23예산 (B)	'23추계 (C)	예산목표 미달분 (A-B)	전년대비 실적변화분(C-A)			합계	
					1~4월 (실적)	5~8월 (실적)	9~12월 (추정)		
소득세	128.7	131.9	114.2	-3.2	-14.5	-8.9	-5.0	-0.6	-17.7
법인세	103.6	105.0	79.6	-1.4	-24.0	-15.8	-4.4	-3.8	-25.4
부가가치세	81.6	83.2	73.9	-1.6	-7.7	-3.8	-2.6	-1.3	-9.3
관세	10.3	10.7	7.3	-0.4	-3.1	-1.4	-1.4	-0.3	-3.4
교육세	4.6	4.7	5.2	-0.1	0.6	0.1	0.3	0.2	0.5
종합부동산세	6.8	5.7	4.7	1.1	-2.1	-0.1	-0.2	-1.8	-1.0
기타 세목	60.2	59.3	56.5	0.9	-3.7	-4.0	-0.4	0.7	-2.8
<b>총국세</b>	<b>395.8</b>	<b>400.5</b>	<b>341.4</b>	<b>-4.7</b>	<b>-54.5</b>	<b>-33.9</b>	<b>-13.7</b>	<b>-6.9</b>	<b>-59.1</b>
(내국세)	(352.3)	(358.0)	(303.1)	(-5.7)	(-49.2)	(-31.3)	(-12.8)	(-5.1)	(-54.8)

주: '23년 예산(B) 대비 '23년 실적(C)을 나타내는 세입결손분(C-B)은 '전년대비 실적감소분(C-A, A: '22년 실적)'과 '전년대비 예산미달분(A-B)'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해 가능

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및 월별 "국세수입 현황"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## (2) 세수결손 시나리오① : 기재부 국세결손 인용 및 지방세결손 포함 66.5조 원

### ○ 국세예산의 예측 실패는 이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세입 부족으로 귀결

-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결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결손으로 연결
  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약 10% 금액이 부과되는 지방세(광역자치단체 귀속)
- 기재부의 부가가치세 세입결손은 지방소비세 결손에 영향
  - 재화와 용역에 대해 10% 세율이 적용되는 총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(25.3%)로 안분(광역자치단체 귀속)
  - 25.3%p 용도 : ①소비분 5%p ②취득세감면분 6%p ③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비용보전 10%p ④시·도 전환사업 등 4.3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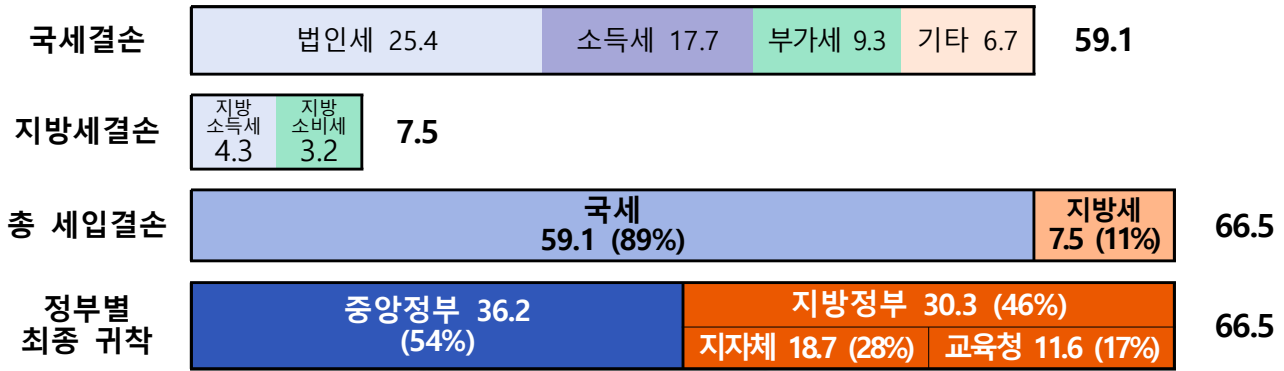
### ○ 지방세결손 7.5조 원(추정) :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와 연결된 지방세입 결손 추가 발생

- 지방소득세  $\Delta 4.3$ 조 원 =  $( \Delta 25.4 + \Delta 17.7 ) \times 10\%$   
 법인세결손분      소득세결손분      지방소득세부가율
- 지방소비세  $\Delta 3.2$ 조 원 =  $\Delta 12.4 * \times 25.3\%$   
 총VAT결손분\*      지방소비세안분비율

\* 부가가치세 결손분(9.3조 원)에 VAT 안분비율(74.5%)로 역산하여 계산

○ 총 세입결손 66.5조 원 = 국세결손 59.1조 원 + 지방세결손 7.5조 원

<그림 2> 총 세입결손 시나리오① : 기재부 국세결손 인용 및 지방세결손 포함  
(단위: 조 원)



주: 1. 국세결손은 기획재정부 추계치이며, 시나리오①은 기존 기재부 추정치에 지방세결손액 추가  
2. 정부주체별 금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 참조  
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(3) 세수결손 시나리오2 : 민주연구원 국세결손 추정 및 지방세결손 포함 69.8조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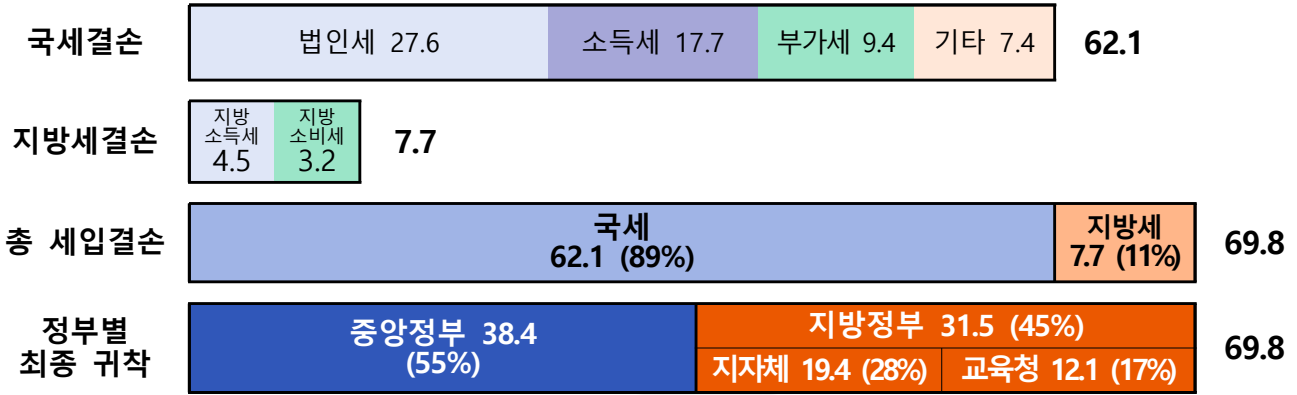
○ 법인세 세수결손 : (기재부) △25.4조 원 → (민주연) △27.6조 원

- 8월 중간예납 실적 : 상반기 대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에도 불구하고, 8월 중간예납액은 소폭 감소. 중간예납은 작년 산출세액의 50%와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 선택가능한데, 전자방식을 많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, 이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의 감소요인으로 작용
  -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상반기 영업이익(조 원) : ('22년) 56.4 → ('23년) 14.6 <전년동기대비 △74%>
  - 8월 중간예납 법인세 실적(조 원) : ('22년) 17.0 → ('23년) 13.9 <전년동기대비 △18%>
- 기재부 법인세 추계 : 8월 실적(△18%)과 마찬가지로 9~12월\*에도 이어질 것으로 가정 추정
  - \*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이며, 1천만 원 이하 법인은 9월까지, 1천만 원 초과 대기업은 9~10월까지, 중소기업은 9~11월까지 각각 납부
  - 기재부의 9~12월 법인세 추계(조 원) : ('22년) 21.1 → ('23년) 17.3 <전년동기대비 △18%>
- 민주연 전망 : 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”의 주요 대기업 상반기 법인세비용 반영
  - 전자·자동차·석유화학 등 주요 10개 분야 매출액 10대 대기업의 중간예납 법인세비용(조 원)
    - ①연결재무제표(98개 기업): ('22.상) 31.0 → ('23.상) 16.5 <전년동기대비 △46.9%>
    - ②개별재무제표(98개 기업): ('22.상) 19.3 → ('23.상) 10.9 <전년동기대비 △43.8%>

○ 부가가치세 수입분, 관세 세수결손 : (기재부) △12.8조 원 → (민주연) △13.6조 원

- 수입액지수의 1~8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율(△12.3%)보다 관세 감소율(△39.4%)이 컸고, 9~12월 또한 이러한 관세 감소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수입 감소는 부가가치세 수입분과 관세액이 각각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
  - 1998~2022년 수입액지수 증가율과 총부가가치세 수입분 증가율의 상관계수 : 0.838
  - 1998~2022년 수입액지수 증가율과 관세 증가율의 상관계수 : 0.713

<그림 3> 총 세입결손 시나리오② : 민주연구원 국세결손 추계 및 지방세결손 포함 (단위: 조 원)



주: 1. 국세결손은 기재부 수치이며, 시나리오②는 주요 세목의 국세결손액을 재추계하고 지방세결손액 합산  
 2. 정부주체별 금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 참조  
 자료 : 민주연구원

## 2.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분 검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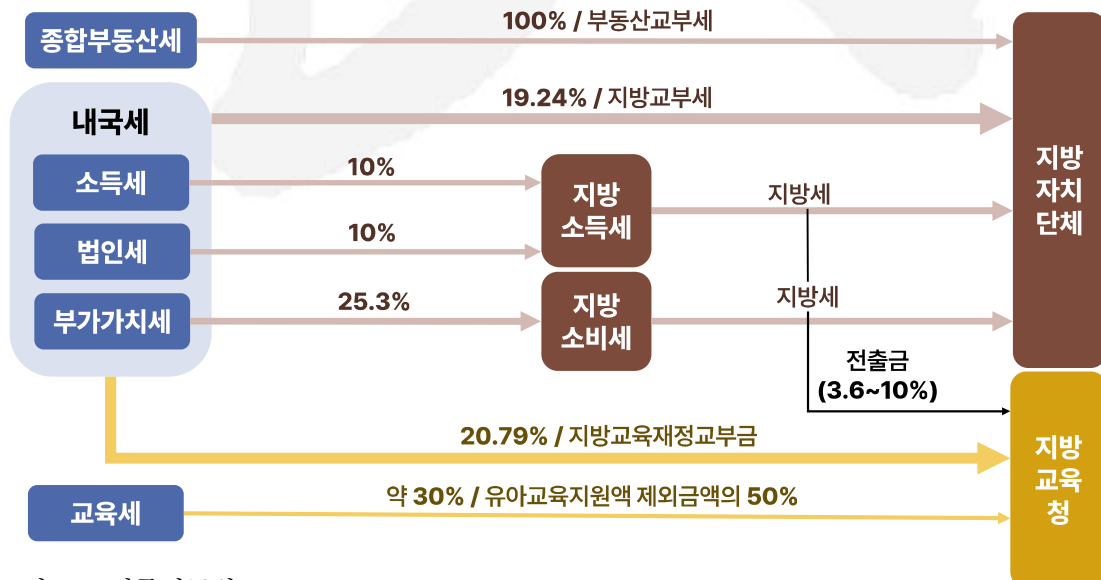
### (1) 기획재정부 추정치 : 중앙정부 △36.2조 원, 지방정부 △22.8조 원

-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(내국세의 19.24%), 지방교육재정교부금(20.79%), 부동산교부세(종부세의 100%), 교육세 특별회계(교육세의 100%) 등 고려
- 내국세 △54.8조 원, 종부세 △1.0조, 교육세\* 0.5조 원 등으로 인해 지방이전재원 변동  
 \* 교육세 재원 중 하나인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(세율 0.5%)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가

### (2) 시나리오① : 중앙정부 36.2조 원, 지방정부 △30.3조 원

- 총 세입결손분에서 정부주체별로 실제 귀속되는 수입감소분 계산  
 - 중앙정부의 지방이전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결손분 추가 반영

<그림 4> 국세와 지방세의 지방정부 이전



자료 : 민주연구원



○ 중앙정부 △36.2조 원(54%), 지자체 △18.7조 원(28%), 교육청 △11.6조 원(17%) 부담

- 중앙정부 △36.2조 원 : ①국세결손분 △59.1조 원
  - ②지방교부세 11.6조 원 (내국세분 10.5조 원, 종부세분 1조 원) 미교부
  - ③교육교부금 11.4조 원 (△54.8×△20.79%) 미교부
  - ④교 육 세 △0.2조원 (△0.5×30%, 2023년 예산 기준)
- 지 자 체 △18.7조 원 : ①지방교부세 △11.6조 원 (내국세분 △10.5조 원, 종부세분 △1조 원)
  - ②지방소득세 △4.3조 원 (△43.1×10%, 소득세·법인세의 surtax)
  - ③지방소비세 △3.2조 원 (△12.4×25.3%, 총부가가치세 감소)
  - ④법정전출금 0.4조 원\* (7.5×5%, 지방소득세·지방소비세)
- 교 육 청 △11.6조 원 : ①교육교부금 △11.4조 원 (△54.8×20.79%)
  - ②교 육 세 0.2조원 (0.5×30%)
  - ③법정전출금 △0.4조 원 (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출액 감소)

\*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는 일정비율(3.6~10%)를 지방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하나, 지방세입 감소로 인해 해당 전출금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플러스 효과

(3) 시나리오② : 중앙정부 △38.4조 원, 지방정부 △31.5조 원

- 중앙정부 최종 귀착분 2.2조 원 감소 : (기재부) △36.2조 원 →(민주연) △38.4조 원
  - 기재부 추정치 대비 : 법인세 △2.25조 원, 부가가치세 △0.05조 원 관세 △0.8조 원 등
-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7.8조 원 급감 : (기재부) △11.6조 원 →(민주연) △19.4조 원
  -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, 내국세 등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크게 증가
- 지방교육청 재정수입 0.9조 원 감소 : (기재부) △11.2조 원 →(민주연) △12.1조 원

<표 2> 총 세입결손에 따른 정부주체별 재정수입 감소액 비교

(단위: 조 원)

	중앙정부	지방정부		합계	
		지자체	교육청		
기획재정부 최종귀착분 추정치	-36.2	-22.8	-11.6	-11.2	-59.0
시나리오①					
기재부 국세결손 인용 및 지방세포함	-36.2	-30.3	-18.7	-11.6	-66.5
(기획재정부 추정치 대비)	(-)	(-7.5)	(-7.1)	(-0.4)	(-7.5)
시나리오②					
민주연 국세결손 추계 및 지방세포함	-38.4	-31.5	-19.4	-12.1	-69.9
(기획재정부 추정치 대비)	(-2.2)	(-8.6)	(-7.8)	(-0.9)	(-10.8)

주: 1. 국세결손은 기획재정부의 국세 기준 세수결손액을 바탕으로 지방이전재원 반영  
 2. 시나리오①은 기존 기획재정부 국세결손액에 지방세결손액 계산하여 반영  
 3. 시나리오②는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관세 등을 재추계한 민주연구원 국세결손액을 바탕으로 지방세결손액 계산하여 반영

자료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'23.9.17.) 및 월별 “국세수입 현황”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분석

### 3. 세수결손 정부대책 평가

#### (1) 기획재정부 대응책

- 중앙정부 : ①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 20조 원 활용 ②이외 기금 4조 원 ③불용 8조 원 ④세계잉여금 4조 원 등을 통해 36조 원 재원 마련
  - 외평기금 : '23년 여유자금 20조 원 → 공공자금관리기금 → 일반회계  
'24년 여유자금 20조 원(정부 예산안) → 공공자금관리기금 → 일반회계
  - 2024년 '원화표시 외평채(국가채무 포함)' 18조 원을 21년\* 만에 발행  
\*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발행하여 2003년 발행 중단. '원화 외평채'는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낮아서 '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'보다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음
  - 최근 불용액 : '21년 3.7조 원, '22년 7.9조 원
- 지방정부 :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\* 34조 원 ②세계잉여금 7조 원 ③지방세 감면 자율화 ④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(모든 사업 발행 가능)
  - \*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,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
  - 지방채 발행 요건 : (현행) 재정투자사업만 대상, 인건비 등 경상경비 목적 발행 불가  
(개정) 국채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에 지방채 발행 가능
  - 지방세 감면 자율 : (현행) 서민생활 지원 등 일부 사업만 가능.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 
(개정)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감면 허용. 교부세 패널티 폐지

#### (2) 정부대책 평가

- 평가①-1 :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하면서,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고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요긴하게 활용
  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기존 통합관리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추가하면서 신설됐고, 기금 조성액은 2018년 말 0.5조 원에서 2022년 말 36.0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

<표 3>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말 조성액 추이 : 2018~2022년

(단위: 조 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지방자치단체	0.5	2.6	8.1	14.6	24.4
지방교육청	-	1.2	2.3	3.0	11.6
합계	0.5	3.8	10.4	17.6	36.0

주: 기존 통합관리기금이 2020.6.9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대

자료 :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“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” 재인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전년도말 적립금(지자체 24.4조 원, 교육청 11.6조 원)의 80%(정부개정안)까지 사용가능하며, 형식상 지자체 19.5조 원, 교육청 9.3조 원 가능



- 내년 성장률 둔화(2.4% → 2.2% : IMF, 2023.10) 및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, 행정안전부의 사용비율 상향조치에 따라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는 드물 것으로 보임

○ **평가①-2 : 기재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가능재원 34조 원은 조례에 따른 최대 활용 가능액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보임**

- 과거 기획재정부 “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”(’23.7.4.) : 12조 원. 세수결손 대책 명시
- 최근 기획재정부 “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”(’23.9.17.) : 34조 원. 공식 대안 발표
- 이후 행정안전부 “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수립”(’23.9.21.) : ’23.8월 예치금 22.8조 원. 활용가능 재원 (현행 60%) 13.7조 원 → (개정안 80%) 19.0조 원 : 지방자치단체 조성액을 의미하며, 실제 활용가능재원은 ’22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(70~90%)까지 최대 사용 가능
-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청별\*로 기금조성 상황이 달라, 실제 활용가능한 재원은 다를 수 있음
  - \* 교육청 기금조성액(조 원) : 경기 1.8, 경남 1.1, 강원 1.0, 충남 1.0, 서울 0.5, 제주 0.05 등

○ **평가② :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결손 감당하기 어려움 → 지방채 발행 또는 지출 삭감**

- 총 결손액 19조 원과 별개로, 부동산시장 침체\*로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입 난항
  - \* 주택매매 거래량(만 건) : (’22.1~7월) 35.0 → (’23.1~7월) 32.3 <전년동기비 △7.7%>
  - 주택매매 가격지수(’21.6월=100) : (’22.7월) 104.8 → (’23.7월) 95.7 <전년동월비 △8.7%>
- 지방정부 지출 삭감 → 경제성장률 감소 요인 → 세입감소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 요건이 완화된 지방채 발행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 (중앙정부 채무를 지방정부가 지는 형태)
-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촉진하여, 기재부가 초래한 세입결손 문제를 지방정부에 전가

○ **평가③ : “내 임기만 아니면 돼 (Not In My Term)” → 향후 국가채무 반영되는 분식회계**

- 외평기금 : 올해 적자국채 발행 없음. 내년 외평채 18조 원 발행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
- 지방정부 31조 원 결손액 감당 불가능 → 지방채 발행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
- 지자체 지방세 감면(재정지출 우회안) → 지방세 수입 감소 → 향후 국가채무 증가

○ **평가④ : 성장률 둔화 → 세입결손 → 외평채 · 지방채 증가 → 국가채무 증가 → 재정건전성 악화**

- 성장률 둔화\*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포기
  - \* ’23년 성장률 전망치(한국은행) : (’22.2월) 2.5% → 2.4% → 2.1% → 1.7% → 1.6% → (’23.8월) 1.4%
- 성장률 둔화, 수출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결손 발생
- 정부는 기존에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, 통합배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입결손을 해결하고 있음
- 결국 해당 기금의 사용은 외평채, 지방채 발행으로 연결
-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채무가 증가
-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